

---

김병로 (연구위원/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

---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초였던 2002년, 미 국무부의 북한 팀들이 필자가 근무 중인 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집권초기라 기세등등하던 부시맨들은 북한을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아직 북한을 제대로 다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보여 필자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결국에는 북한과 타협하고 말 것입니다”라며 다소 냉소적인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한 젊은 친구가 “우리는 클린턴 행정부와는 다르다. 두고 보라”며 흥분된 어조로 따지고 들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바라보던 존 메릴(Merill) 단장은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러 왔으니 그만하고 얘기를 더 듣자”라며 젊은 직원의 흥분을 가라앉혔던 기억이 생생하다.

부시 행정부는 결국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을 완전히 뒤엎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으로 일관하며 4년이란 세월을 허비하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서야 비로소 ‘2.13합의’라는 궁색한 방식으로 타협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비공개각서’라는 것까지 써가며 북한의 핵신고와 불능화를 위해 미국의 북한테러지원금 삭제 의회통보, 대북적성국교역법 해제, 중유지원 등을 맞바꾸는 합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손에 핵무기가 있고 그것을 없애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되었다. “잃어버린 4년”의 손실은 너무나 크다.

이제 총선은 끝났다. 의회 과반의석으로 안정적 권력기반을 갖춘 새 정부는 더 이상 ‘무위정책’으로 기다리지 말고 한반도 정책구상을 내놓아야 한다. 사실, 새 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차별화하기 위해 과거 정부의 대북실적을 완전히 뒤엎는 ABR(Anything But Rho) 정책을 노골화했다. “북핵해결의 진전 없이는 개성공단을 확대할 수 없다”든가, 북한의 공격 징후가 보이면 북핵시설을 무력화하겠다는 ‘북핵발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폄하하는 듯한 남북기본합의서 존중 발언 등 기존정부와 차별화하는 대북발언들을 쏟아 냈다. 북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비전 제시는 뒤로한 채 ‘실용’과 ‘생산’의 잣대를 들이대며 지난 10년의 ‘퍼주기’ 관행과 끌려 다니는 대북태도를 바로 잡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남북관계가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북한은 즉시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관계자 철수와 서해안 미사일 발사,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장의 남측당국자 퇴거조치

로 불안감을 조성했다. 최고인민회의 개최(4.9)를 앞두고 외무성과 군 당국에서는 당국 간 대화중단과 NLL 무력충돌가능성도 언급했다. 또한 노동신문을 비롯한 전 언론매체와 기관을 동원하여 ‘역도(逆徒)’ ‘갯더미’ 등의 혐악한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함과 동시에 ‘비핵·개방·3000’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런 거친 반응과 강경대응으로 한국이 얻을 것이란 별로 없다. 자존심을 세우는 약간의 카타르시스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불안 상황으로 내몰린다. 빈손 쥐고 있는 북한은 이러한 긴장고조로 인해 잃을 것이 거의 없는 반면, 남쪽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인 한국인들은 그런 상황을 원치 않고 있다.

청와대도 북한 발 긴장조성을 원하지 않았던지 “이러한 긴장국면은 돌파구가 마련되기 직전에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생뚱맞은 논리까지 꼬집어냈다. 즉 9.19합의나 2.13합의도 북한의 강경담화나 미사일발사, 심지어는 핵실험의 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것이다. 무척 공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땐 차라리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한반도의 도발상황을 각오하고 거기에 따르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회창 총재의 말이 백번 옳아 보인다.

더군다나 북한을 압박하여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한에 연간 30만 톤의 원유와 30-50만 톤의 곡물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원유공급과 이프라인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6자회담의 테이블로 끌어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편에서 대북압박에 편승할리 만무하다. 오히려 한국이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며 관계를 단절시킬수록 중국의 대북영향력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금년 1월 말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개성공단 방문 사인을 잘 읽어야 한다.

새 정부가 구상하는 ‘비핵·개방·3000’은 아직 개념정립이나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비핵’, ‘개방’, ‘3천’이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비핵’과 ‘개방·3천’의 두 범주로 구분되어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스스로 개방을 추진하면 그에 따라 ‘3천’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현재로서는 비핵과 개방에 대한 정책은 없고 3천에 대한 구상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해결과 북한개방을 마냥 기다렸다가는 투 스트라이크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3천’의 정책을 펴야 한다. 그때 가서 시간에 쫓겨 성급히 방망이를 휘두르다 삼진 아웃되지 않을까 염려도 된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대북 마케팅을 시작해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기본적으로 승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지

지한 결의안을 국내정치문제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될 뿐이다. 그리고 이행과정에서 경제상황과 재정 부담 능력,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비핵·개방·3천’은 비핵, 개방, 3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정치군사 영역에서 비핵평화, 경제 분야에서 개방협력, 삶의 질·인도주의 분야에서 3천을 각각 목표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북핵문제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 풀어나가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문제도 의제화해야 한다. 북한개방에 대해서는 북한이 싫어하는 개방구호를 굳이 내걸기보다 그들이 선호하는 특구개발, 시장화, 현대화 담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북한개방을 유인해야 한다.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이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는 도덕적 기선제압이 필요하다. 1984년 북한의 수해지원 제의에서 느낄 수 있듯이 먼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제의 자체가 이미 상대를 제압하고 나서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잔뜩 뿔이 난 북한을 상대하여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버릇고치겠다, 자존심 세우겠다며 시간만 끌다 막판에 화들짝 놀라 협상한 부시행정부의 “잃어버린 4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집권초기부터 북한의 참여를 유인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상대의 고집을 꺾으려 해도 고집은 꺾지 못하고 싸움만 지속되는 부부관계처럼, 남북관계도 “서로 맞춰 살아” 나가면서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

내용 문의 :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